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
이자율에 관한 규정

<목 차>

1.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(3%)하여 금융소비자 보호
2.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윤덕기
	담당부서 (과)	금융정책과		직급	5급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02-2100-2835
	과장	이형주		이 메 일	dkyoon@korea.kr

금 융 정 책 국 장

김 태 현 (서 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연체이자율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										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'18.2.9.~3.20.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재 연체금리는 “약정금리(3~5%) + 연체 가산금리(연체기간에 따라 6~9%)”로 약 9~14% 수준(최대 15%)으로 운영 중(은행권)<div><div>○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(최대 3%수준, KDI 분석)이나 해외 주요국 연체금리*에 비해 높은 수준</div><div>* (미국) 약정금리 + 2~5%p, (독일) 기준금리 + 2.5%p 수준</div><div>➔ 과도한 연체금리가 차주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상황</div></div></div>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(3%)하여 금융소비자 보호(제3조 제1항)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(제3조 제2항)</div>		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 수렴방식</th><th>의견 내용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</td><td>일반국민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피규제자	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	일반국민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	입법예고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									
피규제자	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	일반국민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	입법예고	-											
9.기대효과	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
	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								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													
기타	12. 일 물 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제9조제4항에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"연체가산이자율"이라 함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제9조제4항에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)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. 다만,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) ①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.
< 신 설 >	②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

제4조 (생략)	<p><u>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.</u></p> <p><u>1.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</u></p> <p><u>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</u></p> <p><u>나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</u></p> <p><u>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</u></p> <p><u>가. 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</u></p> <p><u>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 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</u></p> <p>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	---

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(추진배경) 현재 연체금리는 “약정금리(3~5%) + 연체 가산금리(연체 기간에 따라 6~9%)”로 약 9~14% 수준(최대 15%)으로 운영 중(은행권)

-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(최대 3%수준, KDI 분석)이나 해외 주요국 연체금리*에 비해 높은 수준

* (미국) 약정금리 + 2~5%p, (독일) 기준금리 + 2.5%p 수준

□ (정부개입 필요성) 과도한 연체금리가 차주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여, 연체금리 조정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□ (대안의 내용)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(3%)하고,

-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부이자율 대응지표 제시

□ (선택 근거) 연체금리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추가비용은 최대 3% 이내일 것으로 분석(KDI)

- 우리나라 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금리 + 6~9% 수준이나, 미국의 경우 약정금리 + 2~5%, 독일의 경우 기준금리 + 2.5% 수준에 불과함
- 연체 발생시, 금융회사 손실은 “자금운용 기회비용”, “대손비용”, “관리비용” 등이 있을 수 있으나,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대손비용은

약정금리 산정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, 연체차주에 대한 전화, 등기 발송 등의 관리 비용은 3%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분석됨

구 분		은행권(KDI)
연체금리		대출금리(4%내외) + 연체가산금리(6~9%)
대출금리	기준금리(수신금리)	2% 내외
	가산금리	2% 내외
연체가산금리	자금운용 기회비용(A)	-
	연체 관리비용(B)	3% 미만
	대손비용(C)	-
	페널티 성격	3~6%
연체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(추정) (A+B+C)		3% 미만

-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용지표로써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적용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회사 등	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	특이사항 없음
일반 국민	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 중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해외 사례,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“약정금리+3%p 이내”로 연체금리 인하

* 취약·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('18.1.18일) 등을 통해 쏘 금융업권과의 협의 완료

3. 규제 목표

- ☐ 금융회사의 과도한 연체금리 부과를 방지하여 연체차주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,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
- ☐ 연체발생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도 대용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연체이자율 적용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☐ (규제목적) 해외 사례,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연체금리 부과를 방지
- ☐ (규제수단)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한 합리적 상한(약정금리 + 3%p 이내)을 설정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부과 형태	국 가	연체이자율	관련 법	비 고
가산방식 (+@)	프랑스	<u>대출약정금리</u> +3%	소비자보호법	
	오스트리아	<u>대출약정금리</u> +5%	소비자보호법	
	그리스	<u>대출약정금리</u> +2.5%	중앙은행 규정	

	미국	<u>대출약정금리</u> +2~5%	판례	다수 은행 적용 기준
	영국	<u>대출약정금리</u> +1~2%	판례	다수 은행 적용 기준
	호주	<u>대출약정금리</u> +2%	판례	다수 은행 적용 기준
	뉴질랜드	<u>대출약정금리</u> +2~5%	-	다수 은행 적용 기준
	캐나다	<u>대출약정금리</u> +0%(주담대) <u>대출약정금리</u> +@(여타대출)	이자제한법 소비자보호법	
	독일	<u>MRO¹⁾연동금리</u> +25%(주담대) <u>MRO¹⁾연동금리</u> +5%(가계신용대출)	민법	

4. 비용편익 분석

- 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일반국민 편익 : 연간 5.3조원. 기업(금융회사) 비용 0.4조원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7	2017	1	0.0	조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: 연체금리 수준 인하(약정금리 + 3%p)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0.4	-	0.4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-	5.3	-5.3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0.4	5.3	-4.9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 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☐ 금번 연체금리 개선 방안은 정부가 금융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,

○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연체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연체금리가 부과되는 측면이 있는지 금융회사 등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

* 금융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, 연체금리 인하가 금융권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미미

업권별 연체이자 수익('16년)

업 권	연체이자 수익	총 이자액 대비 비중
은 행	약 456억원	0.32%
저축은행*	약 306억원 ~ 613억원	1.0 ~ 2.0%
보 험	약 598억원	0.8%
상호금융*	약 1,792억원	1.2%
캐피탈	약 267억원	0.48%
카드사	약 1,002억원	1.38%

* 저축은행, 상호금융 연체이자 수익은 추정치

☐ 일반 국민들은 현행 연체금리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된다는 점에서 금번 규제 개선 내용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연체가산이율을 3%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, 상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연체가산이율 적용 가능

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연체이자율 조정은 금융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는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금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반영하는 사항들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☐ 연체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「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」은 관계부처 협의,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임
 - 방안 발표 후에도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

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☐ “연체금리 인하”는 국민들의 과도한 연체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,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임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7	2017	1	0.0	조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: 연체금리 수준 인하(약정금리 + 3%p)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0.4	-	0.4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-	5.3	-5.3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0.4	5.3	-4.9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☐ 비용 :

(정량)제목	연체금리 인하로 연체이자수익 감소		
금액	약 0.4조원		
산식	업 권	연체이자 수익	총 이자액 대비 비중
	은 행	약 456억원	0.32%
	저축은행	약 306억원 ~ 613억원	1.0 ~ 2.0%
	보 험	약 598억원	0.8%
	상호금융	약 1,792억원	1.2%
	캐피탈	약 267억원	0.48%
	카드사	약 1,002억원	1.38%
근거설명	- 각 업권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연체이자 수익 및 비중		

② 피규제 일반국민 :

☐ 편익 :

(정량)제목	연체이자 인하에 따른 연체이자부담 완화		
금액	연간 약 5.3조원		
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재 업권별 평균연체가산금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 7%, 저축은행 11%, 보험 10%, 상호금융 13%, 캐피탈·카드 22% ▪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업권이 연체가산금리를 3% 적용한다고 가정 ▪ '17.11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(95.1만명) 정보에 따른 추정 		
근거설명	현재 업권별 평균연체가산금리를 3%로 일괄 인하한다고 가정하여,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완화된 연체이자부담을 계산		